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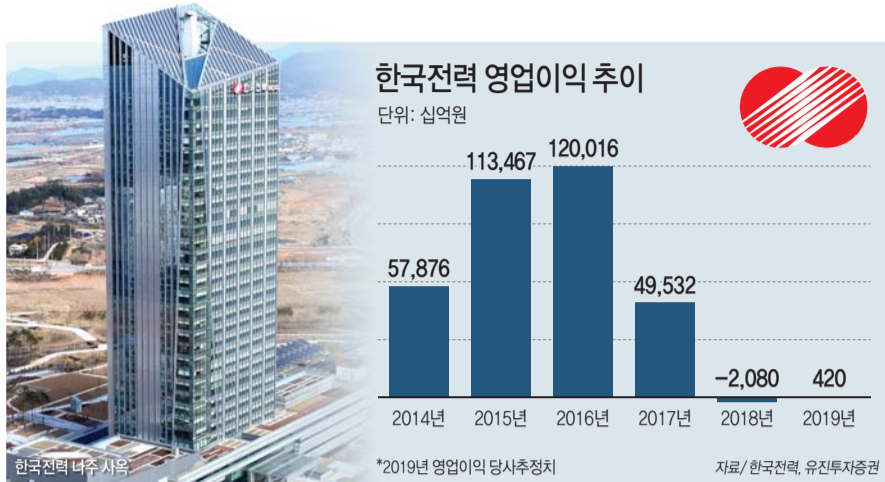
# 적자부담 국민에 떠넘기며... 한전, 말뿐인 '비상경영'

상반기 적자 9000억원 달해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 주장  
직원 연봉은 꾸준히 상승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7년 말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불만족스러운 누진제 적자 보전 방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올해 상반기에도 9000억원을 웃도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정부의 보전 금액이 마땅치 않자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없애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적자에도 한전 내부에서는 '제 배불리기'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갈등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누진제 완화 방안으로 한전이 입은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총 101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던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전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해 생긴 손실을 간접적으로 메워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2020년 예산안에 일회성 보전 방식으로만 편성하면서 누

진제로 인한 적자를 다 메우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적자 전환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2018년 영업손실 2080억원, 당기순손실 1조1745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손실 9285억, 당기순손실 1조1733억을 내며 '비상 경영' 체제에 대한

한전의 선포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전 내부에서는 급여가 계속 인상되는 등 '말뿐인 비상 경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2014년부터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4년 7535만6000원 ▲2015년 7944만원 ▲2016년 8538만2000원 ▲2017년 8240만9000원 ▲2018년 8255만3000원이었다. 올해는 8024만5000원이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이 반영되면 올해 연봉액은 작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기조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받는 '억 대'의 기본급 또한 오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본급을 보면 ▲2014년 1억3306만원 ▲2015년 1억4033만원 ▲2016·2017년 1억4391만원 ▲2018년 1억5169만원으

로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1억5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56만원이 증가했다.

기관장이 받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억 대에 들어섰다. 2015년 9564만6000원이었던 성과급은 2016년 1억3705만원으로 억 단위에 올라섰고 지난해까지 이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적자나 흑자나 문제가 아니고 물가상승률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적자가 났는데 급여를 왜 올리냐고 반문하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다고 보여진다. 흑자가 났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라서 급여를 3%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흑자 상황에서는 3%를 인상할 수 있겠지만 적자 상황에서는 그게 1~2%가 된다"며 "지금도 적자인 상황이 임금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수습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고위험 상품판매, 징벌적 손배를”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시중은행 상시모니터링 필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초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시중은행의 무차별 판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상품 선별, 판매 능력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금융사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면 이번 DLF 사태는 금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린 사건”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시중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양상에 대해 깊은 논의와 검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

된 여러 방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펀드 리콜제’를 제안했고,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이날 “은행 등 금융사의 상품 선별 및 판매 능력·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사의 부실 판매에 따른 책임과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 분조위 또한 분쟁조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기 전 개별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며, 분쟁조정에 대한 기준을 공개해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DLF의 판매과정상 다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앞선 발제에 공감한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의 고의적 과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민영 기자 hong93@

## 특례상장, 바이오만의 잔치 ‘스톡옵션’ 제동

금감원, 상장 58개사 중 51개사  
임직원에게 2240명에 3928만주  
바이오 36개사 모두 ‘스톡옵션’  
실적 저조해도 소수 임원만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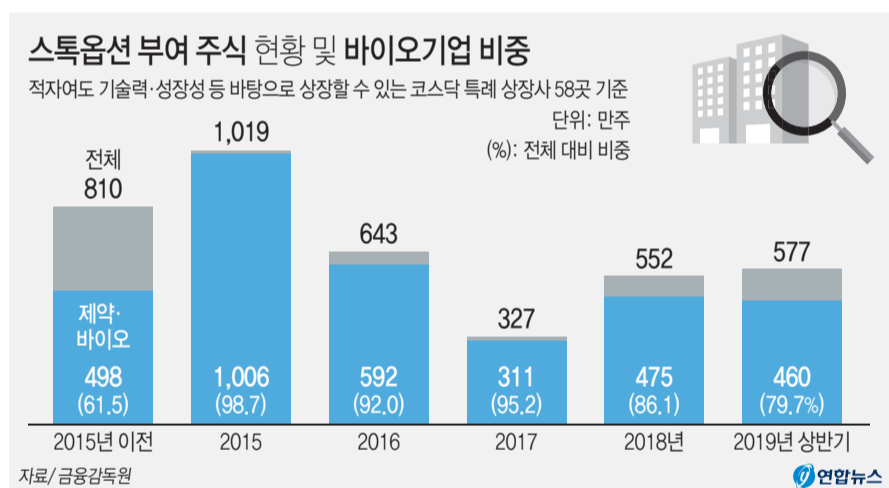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곳들이 영업적자에도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기술력,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대상기간 동안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인 1716만주가 이미 행사됐고, 이 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바이오업종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이어졌다.

분석 기간 중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는 모두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규모는 모두 3342만주로 51개 특례상장사가 부여한 스톡옵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1%에 달했다.

특히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



스톡옵션이 1006만주로 전체 스톡옵션 부여 1019만주 중 98.7%를 차지했다. 2016년에 상장된 A사가 520만주, B사가 104만주를 부여하는 등 상장 직전에 대량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문제는 특례상장사들이 이익을 내기도 전에 과도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하도록 하면서 투자자 피해는 물론 특례상장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행사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며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

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기간 동안 전체 스톡옵션 중 절반이 넘는 2009만주가 임원 336명(15%)에게 부여됐다.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은 스톡옵션을 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됐다는 얘기가.

현재 51개사 중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부여는 1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성과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재직기간 요건만 지키면 된다.

최근에는 임상실패 발표 전에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특례상장사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업종 전반 조기상환 리스크 가능성”

>> 1면 '바이오 CB 폭탄...'서 계속

발행 기업 입장에선 인수자가 채권을 전량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바이오 업종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현재 주가가 CB 전환가액의 하한선 아래로 대부분 추락한

상태다.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도 꺾이며, 채권자들이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당분간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벤처투자자 대표는 “시장이 당분간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종 전반으로 조기상환 리스

크가 변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라임 자산운용의 메타인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메타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회사채를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주가가 부진한데다, 업종 신뢰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만큼 투자금을 조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세경 기자 seel@